

III. 일 본

- 회계연도 : 2007년 4월 ~ 2008년 3월
- 출처 : 平成19年度予算政府案(2006. 12. 24)
 - 平成19年度税制改正の要綱の概要(2006. 12. 19)
 - 平成19年度租税及び印紙收入予算の説明(2007. 1. 26)
- 환율 : 100엔 = 약 786원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2002년 이후 경기회복과 지속적 성장세를 계기로 기초재정수지 적자 감소와 중장기 재정건전화 목표 추진
- 예산기조 및 예산내용 : 「기본방침 2006」에 의거한 삭감과 제도 개선을 통한 세출개혁,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배분의 중점화·효율화
 - 사회보장, 공무원인건비, 지방재정 등 분야에서 세출증가 억제
 - 특별회계 개혁으로 재정건전화 추진
 - 성장력 강화와 제도전 지원, 저출산 대책과 교육재생 등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배분
 - 예산집행조사와 정부계약의 합리화, 결산관련 국회·회계감사원 검사결과의 예산반영 강화
-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소득세·법인세의 대폭 증가로 전년대비 조세수입 16.5%증가(약 7.5조엔), 공채발행액 ▲4.5조엔 감액으로 일반회계예산 +3.2조엔 증액
 - 일반세출예산에서 사회보장·에너지대책비 등 증액, 반면 공공사업·공무원연금·ODA 등 축소로 전년대비 총 1.3%증액(약 6,124억엔)
- 2007년 세제 개정 : 감가상각제도, 중소기업, 주택·토지관련 세제개정으로 ▲4,080억엔의 세수 감소 전망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상황과 전망

- 일본경제는 2002년 이후 장기간 경기회복 국면에 있으며 현재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 → ‘생산·수익 증가’ → ‘고용·임금 증가’ → ‘개인소비 증가’ → ‘생산·수익 증가’ 의 선순환이 작동되는 상황임
 - 2006년 3/4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5%(연율 2.0%)로, 7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실현함. 이러한 추세는 주로 설비투자 및 수출확대에 기인함.
 - 현재 경기회복의 특징은 제조 및 비제조 기업 모두에서 이익수준이 높으며 수출기여도가 과거 회복기에 비해 큰 반면 공공수요의 기여도가 낮다는 점임.

- IMF 등의 국제기관과 일본의 연구기관에 따르면, 2006~2007년도 경제성장률은 각각 2.5%, 2.1%로(실질 GDP 기관 평균 기준) 잠재성장률(1%대 후반)을 상회하는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표 III-1> 일본경제 전망

(단위: 전년대비)

	해외기관			일본 국내기관				전체 기관 평균
	OECD	IMF	Global Insight	日總研	닛세이	히다치	신금중앙	
2006년	2.8	2.7	2.5	2.3	2.3	2.5	2.4	2.5
2007년	2.2	2.1	2.5	2.5	1.8	1.8	2.1	2.1

	2005년도 실적	2006년도 전망			2007년도 전망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 GDP	3.3	2.1	2.2	2.4	1.8	2.5	2.1
민간최종소비지출	2.6	0.2	2.7	1.3	2.3	2.8	2.5
민간주택투자	-0.2	-3.8	4.8	0.7	0.1	0.6	1.4
민간기업설비투자	7.3	14.2	3.9	9.2	4.4	1.5	3.4
정부최종소비지출	1.4	0.5	0.5	0.5	0.6	0.8	0.6
공적고정자본형성	-1.4	-19.0	-7.7	-13.4	-4.1	-3.9	-4.8
수출	9.1	7.1	4.0	7.8	3.7	10.2	5.3
수입	6.5	5.0	3.8	4.6	4.0	7.4	4.8
(국내수요 기여도)	(2.8)	(1.7)	(2.2)	(1.9)	(1.9)	(1.9)	(2.0)
(해외수요 기여도)	(0.5)	(0.4)	(0.1)	(0.5)	(0.0)	(0.6)	(0.2)
명목 GDP	1.8	1.4	2.9	1.9	1.7	3.4	2.4
소비자물가지수	-0.1	0.1	0.5	0.3	0.5	0.5	0.5
경상수지	3.8	-	-	4.0	-	-	4.2
환율	113.3	115.3	116.7	116.0	111.0	113.0	112.0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년 일본경제 전망」(2006년)에서 재인용.

주: 표에서 사용된 연도는 회계연도가 아닌 일반연도임

나. 재정상황과 전망

- 버블붕괴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조치로 2006년 일본의 GDP 대비 재정적자 및 정부채무잔액의 비율은 각 -5.6%, 160.5%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음
- 04년부터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줄고 있으며 예산보다도 실제 적자액이 줄어들고 있음. 이는 02년 이래 지속적 재정개혁의 결과임.

<표 III-2> 일본의 기초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엔)

	1990	1995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예산	+8.7	+0.6	+0.1	-10.6	-11.1	-13.3	-19.6	-19.0	-15.9	-11.2	-4.4
결산	+7.0	-8.4	-2.5	-11.6	-14.2	-19.4	-19.8	-18.0	-12.5	-8.6	-

자료: 재무성

- 일본정부는 향후 재정수지의 착실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2002년도의 GDP 대비 5.7%에서 세출삭감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수지개선 노력과 최근의 세수증가에 의해 GDP 대비 2.4%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짐
 -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도 2003년도 19.8조엔(결산베이스)에서 2006년도에는 당초 예산베이스로 11.2조엔이 되고, 세수증가에 의해 한층 더 개선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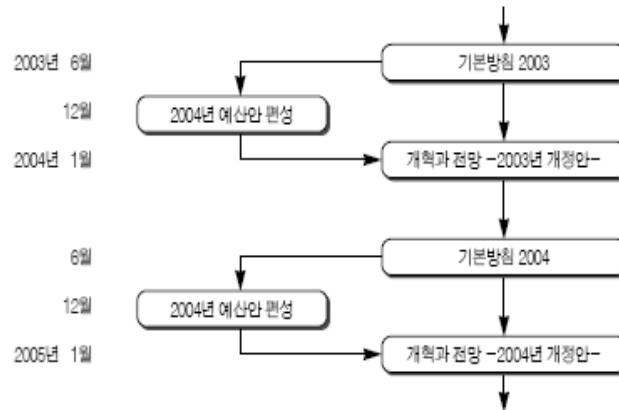
- 2006년 7월 일본정부는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6」을 결정하고 2011년도의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의 흑자화, 세출삭감 규모 등 중장기 재정건전화 목표달성 연도와 삭감목표액 제시.
 - 기초재정수지 흑자화를 위해 2011년까지 필요한 금액은 16.5조 엔이며 사회보장, 인건비, 공공투자 등 분야의 세출삭감으로 11.4조~14.3조 엔, 세제개혁에 의한 세입 증가로 2.2조~5.1조 엔을 조달

< 참고 : 일본의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예산안은 구조개혁의 시발점이 된 2002년 이후 매년 발표되는 “구조개혁과 경제재정의 중기전망”을 토대로 제정된 당해연도 “기본방침”을 감안하여 예산안과 구조개혁안의 유기적 결합으로 편성 ○ ‘기본방침’은 경제활성화전략, 세입·세출개혁 등 당해연도에 수행되는 제반 경제정책을 담은 세부지침이며 매년 경제·재정상황에 따라 변경

- 2007회계연도 예산안의 기본원칙도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6」에 근거하고 있음

[그림 III-1] 일본의 예산안과 구조개혁안의 결합
(예시: 2004~2005년)



□ “기본방침 2006”의 주요 내용

- 일본경제는 5년간의 개혁 추진으로 새로운 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미래세대를 위해 다음 3가지 구조개혁이 요구됨
 - 성장력·경쟁력을 강화 : 경제성장 전략 대강의 추진에 의한 성장력의 강화와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와 규칙(rule)의 개혁
 - 재정건전화로의 구조 : 세출·세입 통합개혁과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 달성
 - 재정건전화 제 II기 (‘07~10년대 초반) : 2011년도 중앙·지방정부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 재정건전화 제 III기(‘10년대 초반~중반) : 2010년대 중반 중앙·지방정부의 합계 채무잔고 GDP비율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중앙정부 단독으로도 채무잔고 GDP비율의 안정적 하락
 - 근본적이고 통합된 세제개혁 추진
 - 안전·안심의 확보와 유연하고 다양한 사회의 실현
 - 사회보장제도의 종합적 개혁, 제도전 지원,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 추

진, 생활에서의 위험에 대처, 풍부한 생활을 위한 환경정비 등

- 경제와 재정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개혁해 나감으로써, ‘성장력 강화와 재정건전화’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강한 선순환’ 구현

<표 III-3> 시기별 재정건전화 목표

시 기	주요 내용
제Ⅱ기 (2007~10년대 초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재정수지 흑자화를 확실하게 실현하는 시기 · 2011년도에는 중앙·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를 확실하게 흑자화 · 재정상황이 심각한 중앙정부의 기초재정수지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방의 기초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세출삭감을 행하면서 세입의 일반재원의 소요 총액을 확보함으로써 흑자 기조 유지
제Ⅲ기 (2010년대 초반~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대비 채무잔액의 비율을 낮추는 시기 · GDP 대비 채무잔액의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춤 ·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GDP 대비 채무잔액의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자료: 내각부

2. 예산기조 및 예산내용

가. 예산기조 및 중점분야

- 「기본방침 2006」에서 정해진 세출개혁을 확실하게 실시하여 최대한의 세출삭감을 추진
- 신규공채발행은 과거최대의 ▲4.5조엔을 감액하고 교부세 특별회계의 건전화를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작년도를 대폭 상회하는 ▲6.3조엔의 재정건전화 실현
 - 교부세 특별회계의 신규 차입을 1993년도 이래 14년만에 정지하고, 국

가부담분의 차입금(약 19조엔)을 일반회계로 승계하도록 한 다음 상환
개시(채무상환비 1.7조엔)

- ▲4.5조엔의 공채 발행 감액으로 앞서 언급한 상환비 증가액 1.7조엔
을 포함시키면 ▲6.3조엔의 재정건전화 달성
- 그 외 교부세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차입금(지방 부담분)을 0.6조엔 상
환

□ 성장력 강화·재도전 지원·저출산 대책·교육 재생 등에 중점적으로 예
산을 배분

나. 세출·세입개혁의 기본방향

□ 세출개혁

- 세출삭감으로 2011년도의 기초재정수지 흑자와 국민부담 감소 실현
 - 과거 5년간 개혁실적에 근거하여 제로 베이스에서 세출을 재검토하
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며 탄력적 세출개혁을 실시
 - 경제사회정세의 변화에 따라 기초재정수지의 흑자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대응을 위해 2011년도까지 취해야 할 세출개혁의 내용을 매
년 검증 및 재검토

<표 III-4> 향후 5년간 세출개혁의 개요

(단위: 조엔)

	2006 년도	2011년도		삭감액	비고
		자연증가	개혁후		
사회보장	31.1	39.9	38.3	-1.6	
인건비	30.1	35	32.4	-2.6	
공공투자	18.8	21.7	16.1~17.8	-5.6~-3.9	국가의 공공사업 -3%~-1% 지방의 공공사업 -3%~-1%
기타 분야	27.3	31.6	27.1~28.3	-4.5~-3.3	과학기술진흥비 1.1%~경제성 장의 범위내, ODA -4%~-2%
합계	107.3	128.2	113.9~116.8	-14.3~-11.4	
	필요액: 16.5				

주: 금액은 중앙·지방정부 합계
자료: 内閣府

□ 세입개혁

- 2011년도의 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을 위해 책정한 필요액과 세출삭감액과의 차액은 세제개혁에 의해 대처해 나갈
- 사회보장급부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소비세를 그 재원으로 함
- * 소비세율의 인상과 관련하여 시기와 인상폭을 명확한 형태로 밝히고 있지는 않음
- 국민소득이나 지역격차, 빈번한 세제 변경으로 인한 경제거래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세체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이고 통합적 개혁이 필요함
 - 그 결과로 세수 증대 및 세수입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지만 net base에서 필요한 세입 확보가 요구됨

다. 07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 ▶ 삭감과 제도·정책의 재평가를 통한 세출개혁 강화
- ▶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배분의 중점화·효율화

□ 세출개혁의 강화 ~ ① 「기본방침 2006」에 의한 세출개혁

→ 중기 세출개혁계획에 따라 각 분야의 개혁을 확실히 실시

○ 사회보장

- 고용보험의 국가 부담액 감축과 생활보호의 재평가로 고령화 추세에 동반하는 세출증가를 약 ▲2,200억엔 억제

○ 공무원 인건비

- 2,129인의 정원감축과 급여구조개혁, 민간급여와의 비교 등 인건비 개혁으로 약 ▲1,900억엔을 절감

○ 지방재정

- ▲3.4만명의 정원 감축과 급여구조개혁으로 급여관계경비 ▲0.4조엔 삭감
- 투자경비 ▲1.5조엔 삭감
-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지방 일반재원의 총액 확보

○ 공공사업

- 총액의 엄격한 억제와 지역의 자립 활성화, 성장력 강화에 의한 비용감축과 입찰 개혁 등으로 ▲3% 이상 삭감

○ 기타(ODA, 과학기술, 방위, 교육 등)

- ODA : 비용감축과 우선순위 선정 등으로 ▲4% 삭감
- 과학기술 : 우선순위 조정 등 선택과 집중 강화로 +1.1% 증액
- 방위 : 미사일 방위와 미군 재편성에 대한 적정 대응으로 ▲0.3% 삭감
- 교육 : 교육재생과 교육개혁 관련 예산조치에 충실하는 한편 기관 보조적 조성에 대해 ▲1% 삭감

□ 세출개혁의 강화 ~ ② 제도·정책의 재평가 등

○ 특별회계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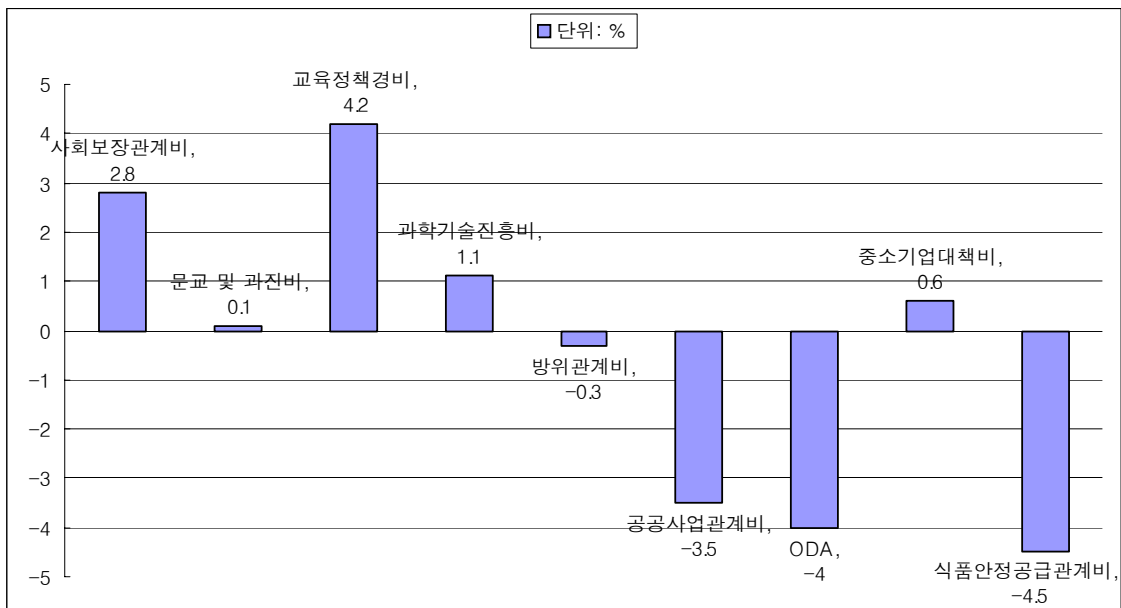
-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안(가칭)제정으로 현행 31개의 특별회계를 17개로 통폐합하고 일반회계와 다르게 취급하던 사항을 개정 및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법안을 차기국회에 제출
- 7개 특별회계의 잉여금(1.8조엔)을 일반회계로 이월하여 재정건전화
- 개혁대상 세출액수(세출총액의 중복계상분, 국채 상환액 등)를 고려하여 ▲0.7조엔 삭감

- 「도로특정재원 재평가에 관한 구체적 안」(06.12.8 각의 결정) 시행으로 일반재원 확대와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3,286억엔의 국채발행 감액 효과

□ 예산배분의 중점화

- 세출 전반을 억제하며 ‘창조와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배분

[그림 III-2] 일반회계 주요경비별 전년도 예산대비 증감률



자료: 재무성

(활력 있는 개방경제사회 구축 ~ 성장력 강화, 재도전지원의 중점화)

○ 경쟁력 강화로 혁신과 생산성 향상

▪ 국제경쟁력 강화

- 관광입국의 추진(84억엔 : +20%)
- 정보대항해 프로젝트(46억엔)
- 차세대 지능 로봇(19억엔)

▪ 국가기간기술 추진

- 우주 수송 시스템(379억엔: +48%)
- 차세대 슈퍼 컴퓨터(77억엔: +118%)

▪ 물류인프라 정비

- 3대도시권 순환도로(1,859억엔: +10%)
- 도로, 항만 등 물류기능강화 중점 전략(900억엔: +34%)
- 슈퍼 중추 항만 프로젝트(524억엔: +37%)

▪ 「인재입국(人財立國)」의 추진

- 글로벌 COE 프로젝트¹⁾(158억엔)

▪ 농수산 정책의 적극적 추진

- 농림수산물 수출촉진대책(46억엔: +354%)

○ 「매력있는 지역」 조성으로 지역의 활성화

▪ 지역의 지혜 이용

- 도시계획 교부금(2,430억엔: +2%)
- 지역 자립·활성화 종합 지원제도(350억엔)

▪ 지역 담당자 육성

- 농업 담당자 지원(35억엔)

1) 한국의 'BK21' 사업과 유사한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 지역 자원의 활용
 -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프로젝트(101억엔)
 - 지역간 교류
 - UJI 턴²⁾ 지원(1억엔: +55%)
 - 지역교류 강화를 위한 종합도로전략(3,059억엔: +15%)
 - 지역의 발전기반 정비
 - 지역재생 교부금(1,418억엔: +3%)
 - 정보격차 해소 사업(57억엔: +8%)
 - 승리와 패배가 고정화되지 않고 다양한 배움과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건설을 위한 재도전 지원
 - 청년고용 지원
 - 청년구직자 능력개발 지원(18억엔: +50%)
 - 청년자립지원 네트워크 정비(20억엔: +42%)
 - 복선형(複線型) 사회의 실현
 - 농림어업 취업지원 「인생2모작」 등(94억엔: +25%)
 - 중소기업자 지원
 - 재도전 지원 전문상담창구 마련(8억엔)
 - 재도전 지원을 위한 용자·보증제도(2억엔)
- (건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실현~ 저출산대책·교육재생 등)
- 저출산대책·자녀양육 지원
 - 유아 수당 확충(692억엔)
 - 육아휴직 급부 확충(17억엔)

2) 도시에서 취학, 취직한 근로자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U턴, 도시에서 취업한 근로자가 도시와 출신지 사이의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J턴, 원래의 대도시 주민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I턴이라 한다.

-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교부금(365억 엔: +7%)
- 방과후 아동 교실(68억 엔)
- 의사확보·암 대책
 - 의사확보대책(92억 엔: +125%)
 - 암 대책(212억 엔: +32%)
- 지구환경문제 대응
 - 교토 메카니즘 크레딧 취득(129억 엔: +139%)
- 교육의 재생
 - 전국학력조사(66억 엔)
 - 이과교육의 충실(79억 엔: +37%)
 - 학교평가의 추진(8억 엔: +32%)
- 집단따돌림·아동학대 대책
 - 집단따돌림문제 대책(69억 엔: +43%)
 - 아동학대·가정폭력 대책(23억 엔: +29%)
- 치안대책
 - 아동안심 프로젝트(20억 엔: +4%)
 - 지역안전 안심 스테이션(2억 엔: +20%)

□ 예산배분의 효율화

- 예산집행조사 실시로 사업·제도의 필요성을 철저히 검증 후 예산요구와 사정에 반영, 미진한 사업은 사업자체를 폐지 또는 정지.
→ 07년도 예산 반영액 288억 엔
- 외무성의 여권발급관련경비(전자신청시스템운영경비), 국토교통성의 반

기별 지가동향 조사 등 비효율적 사업의 재평가와 폐지 검토

- 공익법인등과의 수의계약 재평가 계획을 각 부처가 작성하여(06. 6월) 상황 파악 후 예산에 반영 → 07년도 예산 반영액 106억엔

- 방위성의 정보시스템 등의 임차료 관련경비
 - 종래 초년도만 경쟁입찰, 차년도부터는 수의계약으로 차입
 - 07년도부터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예산에 계상하고 복수년도 일반경쟁입찰로 경비 절감(반영액: 77.9억원)

- 법무성의 등기부 이행작업 위탁경비
 - 종래 수의계약, 07년도부터 일반경쟁입찰(반영액: 5.5억엔)

- 결산관련 국회 결의나 회계감사원의 검사결과를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하고 제도와 예산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함

-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안(가칭)」에 기초하여 특별회계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재정건전화 실현(반영액: ▲17,664억엔)

- 도도부현(都道府縣) 노동국으로부터 부정지출 등의 지적을 엄밀하게 수용하고 각 경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배제(반영액: ▲40억엔)

- 재무국에 의한 예산집행조사를 확충하고 조사대상을 증가

- 07년도부터 재무국 주체로 예산집행조사를 확충하고 결과 공표
 - 11개 대상사업, 07년도 예산 반영액 23억엔

- 예산집행조사의 조사대상 증가
 - 조사대상 사업수: ('05) 57개 사업 → ('06) 68개 사업
 - 현지조사 대상수: ('05) 542개소 → ('06) 816개소(재무국조사분 포함)

- 재무국에 의한 예산집행 조사시 지역의 견해 반영하여 안건을 발굴하고 「예산집행 의견함」을 재무성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국민 의견 수렴

<표 III-5> 07년도 일반회계예산

(단위: 억엔)

	06년도 예산	07년도 예산	'06→'07	비 고
(세입)				
세 수	458,780	534,670	75,890	
기타수입	38,350	40,098	1,748	
공 채 금	299,730	254,320	△45,410	공채의존도 30.7%(06년도 37.6%)
건설공채	54,840	52,310	△2,530	
특례공채	244,890	202,010	△42,880	
계	796,860	829,088	32,228	
(세출)				
국 채 비	187,616	209,988	22,372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 특별회계에서의 차입금(국가부담분)의 승계 증가분(20,733억엔, 채무상환비 17,322억엔) 포함
지방교부세 등	145,584	149,316	3,732	
일반세출	463,660	469,784	6,124	기초연금 국고부담비율의 인상과 아동수당 확충분(1,343억엔) 및 전력개발촉진세 수입의 일반회계 편입에 동반한 세출증가분(3,179억엔) 포함
계	796,860	829,088	32,228	

자료: 재무성

3.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가. 일반회계세입

□ 조세수입

- 일반회계 조세수입은 전년대비 16.5%(약 75,890억엔)증가하였으며 이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대폭 증가(전년대비 각 29.4%, 25.3% 증가)에 기인함
- 경기회복으로 인한 근로자 소득 증대와 광공업생산, 국내기업물가와 소비자물가 및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증가에 기초하여 관련수입 증액

<표 III-6> 2007년 조세 및 인지수입

(단위: 억엔)

세 목	전년도 예산액		07년도 전망액 (B)	비교증감(△)액	
	당초(A)	보정 후		(B-A)	신장률(%)
원천소득세	104,250	118,810	133,070	28,820	27.6
신고소득세	23,630	26,890	32,380	8,750	37.0
(소득세 합계)	(127,880)	(145,700)	(165,450)	37,570	29.4
법인세	130,580	158,090	163,590	33,010	25.3
상속세	13,800	14,900	15,030	1,230	8.9
소비세	105,380	104,850	106,450	1,070	1.0
주 세	15,720	15,720	14,950	△ 770	△ 4.9
담배세	9,400	9,400	9,260	△ 140	△ 1.5
휘발유세	21,560	21,560	21,350	△ 210	△ 1.0
석유가스세	140	140	140	0	0.0
항공기연료세	870	870	930	60	6.9
석유석탄세	4,760	4,760	5,330	570	12.0
전력개발촉진세	-	-	3,460	3,460	-
자동차증량세	7,370	7,370	7,160	△ 210	△ 2.8
관 세	9,060	9,060	9,290	230	2.5
톤 세	90	90	90	0	0.0
인지수입	12,170	12,170	12,190	20	0.2
일반회계 합계	458,780	504,680	534,670	75,890	16.5

자료: 재무성

국채발행

(단위: 억엔)

06년도 당초(A)	06년도 보정 후	07년도 예산안(B)	증감액(B-A)
299,730	274,700	254,320	△ 45,410

자료: 재무성

나. 주요 분야별 예산

<표 III-7>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단위: 억엔)

	06년도 예산			07년도 예산		
		'05→'06 증감액	신장률(%)		'06→'07 증감액	신장률(%)
사회보장관계비	205,739	1,931	0.9	211,409	5,670	2.8
문교 및 과학진흥비	52,671	△4,559	△8.0	52,743	72	0.1
과학기술진흥비	13,312	142	1.1	13,462	150	1.1
공무원연금관계비	9,989	△704	△6.6	9,235	△754	△7.5
방위관계비	48,139	△425	△0.9	48,016	△123	△0.3
공공사업관계비	72,015	△3,295	△4.4	69,473	△2,542	△3.5
경제협력비	7,218	△186	△2.5	6,913	△305	△4.2
(참고) ODA	7,597	△265	△3.4	7,293	△304	△4.0
중소기업대책비	1,616	△114	△6.6	1,625	9	0.6
에너지대책비	4,709	△245	△4.9	8,647	3,938	83.6
식품안정공급관계비	6,361	△394	△5.8	6,074	△287	△4.5
산업투자특별회계이전	481	△229	△32.3	203	△278	△57.8
기타사항 경비	51,222	△949	△1.8	51,946	724	1.4
예 비 비	3,500	0	0.0	3,500	0	0.0
일반세출 합계	463,660	△9,169	△1.9	469,784	6,124	1.3

자료: 재무성

□ 사회보장관련비

- 「기본방침 2006」에 따라 고용보험의 국고부담 감축과 생활보호 재평가 등 세출개혁을 실시하는 한편 당면과제인 저출산, 의사확보, 임대대책 등에 중점적 대응

□ 공공사업관계비

- 「기본방침 2006」에 기초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총액 억제, 비용 감소, 입찰 개혁 등을 강화하여 예산배분의 중점화·효율화 추진

- 지방재정관계비
 - 지방세출과 지방교부세를 지속적으로 억제하며 지방재정의 건전화 달성

- 교육관계비
 - 교육개혁과 교육재생을 위한 예산은 중점적으로 증액하되 인건비 등 기관보조적 예산은 「기본방침 2006」에 따라 삭감하는 등 우선순위 강화

- 과학기술관계비
 - 과학기술진흥비 추진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우주기술 등 국가기간 기술과 지역 과학기술을 육성하는 한편, 과학 연구비 보조금의 활용으로 기초과학연구를 지원을 강화하며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활용

- 방위관계비
 - 탄도 미사일 방위와 미군 재편성 사업에 대응하며 장비조달 등을 한층 효율화하고 원유가격상승과 엔저에 의한 예산의 자연증가요인이 있으나 전년도 대비 0.3% 삭감

- ODA 관련
 - 「기본방침 2006」에 충실하며 ODA 사업량을 확보하면서 비용삭감, 예산의 우선순위 고려, 중점화 등 현재까지의 개혁을 지속적 추진

- 농림수산관계비
 - 중점적·집중적으로 농업인을 육성하고 식량관리의 수지 건전화와 총인건비 개혁을 반영하면서 예산규모 감축 진행
 - 또한 적극적 농업정책을 추진하며 지역의 활성화, 지구환경문제 등의 과제에도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

4. 2007년 세제 개정

→ 감가상각제도, 중소기업, 주택·토지 관련 세제개정으로
총 ▲4,080억엔의 세수 감소 효과 발생

- 감가상각제도 개편으로 ▲4,020억엔의 세수 감소 효과
 - 2007년 4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가능한도액(취득가액의 95%) 및 잔존가액을 폐지하고, 내구연수 경과 시점에 1엔까지 상각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250% 정률법을 도입
 -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가능한도액까지 상각 후 5년간 1엔까지 균등 상각이 되는 것으로 함
 -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FPD) 제조설비 등의 법정 내구연수를 단축

- 중소기업 관련 세제개정으로 ▲120억엔의 세수 감소 효과
 -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제도에 대해 자본금 1억 이하의 중소기업 제외
 - 실질적인 1인 기업의 기업주의 급여 일부를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의 적용제외 기준을 현행 800만엔에서 1,600만엔으로 인상
 - 기업승계 관련 세제에서 거래 상장이 없는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에 한하여 60세 이상 부모가 증여할 때 그 적용을 선택 할 수 있게 하며 2,500만엔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엔으로 확대
 - Angel 세제
 - 특정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관련 양도소득 등 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함과 동시에, 적용 요건 완화 및 관련절차 간소화

- 주택·토지 세제개정으로 +70억엔의 세수 증가 효과
 - 주택대부자금 감세에서 세원이양에 따라 중·저소득층 감세액 감소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공제 기간과 공제율 관련 특례사항을 신설
 - 주택의 barrier-free³⁾ 촉진세제의 신설
 - 거주용 재산양도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3년으로 연장

3) 건축물과 주택에서 건축적인 장애를 제거하여 장애인과 노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설계기준을 의미한다.

□ 국제 조세

- 이전가격 세제에 대해 조세조약 상대국과의 상호 협의와 연관되는 납세 유예 제도를 창설

□ 조직 재편성 세제·신탁 세제 등

- 회사법상 삼각합병에 대응할 수 있는 세제 조치와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
- 신탁법 개정으로 새 유형의 신탁에 대응할 수 있는 세제 정비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수탁자 단계에서 법인 과세를 행하는 등 과세중립과 공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마련
-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일정 리스 거래를 매매로 간주

□ 금융·증권 세제

- 상장주식 등의 배당·양도이익에 연관되는 경감세율의 특례 적용기한을 1년 연장

□ 납세 환경 정비

- 전자증명서를 취득한 개인이 전자신고할 경우 관련 소득세 세액공제제도 마련과 세무관련 절차의 전자화를 촉진
- 편의점에서 조세 수납

<표 III-8> 2007년도 세제개정(내국세 관련)에 의한 세수변동 예상액

(단위: 억엔)

개 정 사 항	2007 (증감예상액)	2008
1. 감가상각제도	△ 4,020	△ 5,110
2. 중소기업 관련 세제		
(1) 특정 동족회사의 유보금 과세제도 재평가	△ 80	△ 270
(2) 특수지배 동족회사의 임원급여 손해액 불산입제도 재평가	△ 40	△ 130
3. 주택 세제		
(1) 세원이양에 대응한 주택대부자금 감세특례 신설	+ 50	△ 620
(2) 주택 Barrier-free 촉진세제 신설	△ 0	△ 50
(3) 주택금융지원기구의 저당권 설정 등기 대응조치	+ 20	+ 20
4. 기 타		
(1) 기부금세제 등		
① 기부금공제 공제대상 한도액 인상	△ 10	△ 20
②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세제 신설	△ 30	△ 40
③ 전자정부 추진세제 신설	△ 0	△ 30
④ 농업 경영기반 강화 준비금제도 신설	△ 20	△ 20
⑤ 사업혁신설비 특별상각제도 재평가	△ 20	△ 20
(2) 기타 조세 특별조치 폐지·연장 등	+ 70	+ 100
합 계	△ 4,080	△ 6,190

자료: 재무성